요 약

제1장 서론

- 건설업은 산업적 속성상 현장 관련 비용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이 복잡하여 건설업계는 세무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일부에서는 건설업체에게는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건설업계의 법인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장 법인세의 성격 및 건설업체 현황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로서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임.
- 법인세는 신고주의 조세로서 납세자인 법인이 사업 연도가 종료되면 사업 연도 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기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임.
-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확정된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更正).

- 정부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는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득금액에 기초로 하는 원칙적인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이 있음.
- 추계에 의하는 방법에는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가 있음.
- 기준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 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보조적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인정해 주는 방법임.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 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임.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우리나라 전체의 신고 납부한 법인세 세액 이외에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는 2002년 2조 80억원으로 신고세액 17조 2,350억원 대비 11.7%임.
- 이에 반하여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세액 대비 추정 세액의 비율을 산정해보면 2002년의 경우 18.7%로서 전산업의 신고세액 대비 추정 세액의 비율보다 높음.
- 이는 건설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세무조사 업체수가 많다든지, 조사 적출 세액이 많다든지, 조사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제3장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의 타당성 검토

- 이론적 측면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의 유무 또는 다과에 불구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과세소득 금액으로 하기는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음.
-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간접세와 다를 바 없어 더 이상 법인세라고 할 수 없음.
- 건설업체의 수용 가능성 측면 : 세부담이 대폭 증가되는데다가, 금융거래 및 공사입찰에서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함.
- 2002년의 매출액 순이익률 : 추계소득률은 2.3 : 9.4로 추계소득률이 3배 이상 더 높음.
- 업체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 42.4%, 반대 40.7%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법인의 실질소득외의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입법례는 유럽 일부 국가의 톤세(tonnage tax) 외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건설업에 활용하기도 곤란함.
- 톤세는 선박의 일당 과세표준을 순톤수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운항일수를 곱하여 연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경쟁에서 국적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건설업은 해운업처럼 물량단위의 통일 및 비용의 표준화가 곤란하여
톤세 제도에서 시사점을 찾기 어려움.
- 매출액 기준 소득금액 산정방안은 비용처리 기준의 획일화로 세무조사
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현실적으
로 도입의 타당성이 부족함.

제4장 건설업체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 건설업은 노무비 등 현장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완벽한 증빙 확보가
어려움.
 - 일용근로자를 동원 관리하는 십장은 재하도급을 받는 자이나 업자
등록이 없으므로 건설업체는 십장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직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십장은 일당을 면세점(8만원)이하로 낮추고 작업 일수를 증가시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건설업체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인력시장 구조상 원인 : 건설 기능인력 시장은 일용 형태가 대부분이여
서 노무관리가 어려우며, 3D산업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인력만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전체 건설 기능인력 148만 8천명의 9%인 13만 4천명이 불법체류 외
국인으로 추정됨(2003년 3월 기준).
- 영세기업의 능력상 한계 : 유능한 경리 직원이 없고 내부 통제도 미흡
하여 완벽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며, 사후에 일괄 정리 결산하므로 세무
조사시 증빙 미비로 인한 적출률이 높음.

- 실제 공사비 투입에 대한 노무비 증빙을 완벽하게 구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세무 조사 시 손금 부인으로 법인세는 물론 인정상여 소득세까지 추징, 조세 부담이 가중됨.

제5장 노무비의 최소 인정기준 마련

- 개요 : 개별공사의 노무비에 대한 일종의 기준경비율을 만들어 추계 소득금액 산출시는 물론 세무조사시 노무비의 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도 동 기준만큼은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
- 산재보험에서도 노무비율을 만들어 하도급의 경우 확정보험료 정산에 적용하고 있음.
- 기준설정 : 설계서·내역서상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선은 주요 공종별, 하도급 단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산정 기법을 활용하여 설정함.
- 적용대상 : 상시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업에도 실태과약 결과를 기초로 보완적으로 적용함.
- 적용시한 : 십장에 대한 법률관계나 관리체계가 확립되고 고용보험이 정착되며 불법체류근로자 문제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적용효과 : 노무비 증빙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여 세무조사에서 적출되면 적출된 전액을 손비부인 당하고 있으나 기준율만큼은 손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세부담 가중이 완화됨.
- 예시 : 설계서상 노무비 3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증빙미비 1억원이 적출된 경우 인정기준이 설계서상 비용의 90%라면 3,000만원은 부인되고 7,000만원은 인정될 것임.

제6장 세무조사 관련 애로해소 방안의 검토

-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서 동일 규모의 외형 금액이라 하더라도 낙찰률, 하도급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